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내달 신청키로

추진위, 면적 단계적 확대…사유지 문제 우선 해결

자연사박물관 건립·원효사 지구 생태복원도 추진

무등산을 현재 공원 면적(30.23㎢) 기준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공원 내 사유지 문제를 우선 해결키로 했다.

아울러 지정 신청때 국립무등산자연사박물관 건립과 원효사지구 생태복원 사업도 함께 요청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광주시는 29일 교수·시의원·시민단체·지역주민 등 각계 인사 30명으로 구성된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범시·도민 추진위원회'를 갖고 다음달 환경부에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사유재산 침해 논란 불식을 위해 현 면적으로 국립공원 지정 ▲자연환경 등에 대한 철저한 기초조사 ▲보존구역과 최소한의 개발구역 설정하는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요구했다.

또 군부대가 있는 정상 시설은 국립공원 및 주상절리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장애요인이 돼 이전 및 복원이 필요하며, 국비 지원과 무등산 공유화 사업을 통해 사유지를 점진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구선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상임고문은 "국립공원 지정으로 담양 가사문학권을 비롯한 주변 문화유적의 가치가 동반 상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구역을 지정할 때도 주민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 같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내용에 국립무등산자연사박물관 건립 및 원효사지구 생태복원 사업 등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무등산공원 주변이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자연자원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다양한 희귀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21번째 국립공원 지정에는 별 다른 장애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입석대 및 서석대 등 주상절리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2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무등산은 전체 면적(30.23㎢) 중 57.0%인 17.23㎢가 사유지로, 매년 565만~860만명의 탐방객이 원효사지구와 증심사지구를 통해 무등산을 오르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무등산자연자원 및 기초현황조사에 따르면 무등산의 총자산가치는 2조9000억원으로 집계된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FC 팀명 교체

'레이어스=홍어' 논란 해소

광주시가 '홍어' 논란을 빚은 광주시민프로축구단 팀 이름을 발표 3일 만에 결국 바꾸기로 했다.

광주시는 29일 "이날 오후 팀 명칭 심의위원회를 열어 '광주레이어스(Rayers)'를 다른 이름으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Ray'에 가오리라는 뜻이 있으며, 이는 광주·전남지역을 조롱할 때 흔히 쓰이는 홍어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개명해야 한다는 일부 팬들의 지적을 받아들였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광주레이어스가 공모를 통해 당선된데다 팀 이름을 변경하면 홍어가 전라도민을 비하하는 단어임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며 개명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는 새로운 팀 이름을 공모하지 않고 내달 1일 열리는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광주시로서는 팀 명을 공개한 지 3일 만에 개명을 결정함으로써 졸속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장흥서 '통합의학박람회' '2010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가 29일 장흥 천관산 앞 특설무대에서 박준영 전남지사, 김필식 동신대 총장, 김기옥 한국한의학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했다. '그린 건강, 인간중심 헬스케어'를 주제로 전국 처음으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음달 7일까지 10일간 장흥 일대에서 열린다. 〈전남도 제공〉

사설

시의회 '유급보좌관제' 그렇게 시급한가

광주시의회의 수준이 이 정도인가. 법적인 근거도 없는 유급 보좌관제를 도입하기 위해 꼼수까지 부리고 있으니 그야말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006년 인턴보좌관제를 추진했다가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되자 이번에는 '의정 서포터즈'라는 편법까지 동원해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의정 서포터즈 도입을 위한 용역을 광주발전연구원에 발주한 뒤 이를 수행할 임시연구원을 채용, 의원 보좌관인 '서포터즈'로 활용할 계획이라니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닌가. 예산만 해도 28명의 서포터즈를 활용하는 데 무려 6억4300만 원이 든다고 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유급 보좌관을 둬야할 뚜렷한 이유나 명분이 있는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의원 스스로 처리하지 못할 만큼 업무량이 폭주하든지, 그 정도의 투자를 해도 좋을 만큼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펴왔는지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보좌직원을 둔다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화급하고 중요한 일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광주시의회의 편법 서포터즈 추진은 '자기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오죽했으면 의원들이 받고 있는 4855만원의 세비 내에서 보좌관을 채용하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겠는가.

시의회는 유급 보좌관제 추진을 철회하고, 국회에서의 지방자치법 개정 여부를 따르는 것이 순리다. 지난 민선 4기말 제 식구를 챙기겠다고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를 강행하면서 경찰까지 동원해 조례를 통과시킨 작태가 엊그제인데, 또다시 보좌관제를 고집한다면 시민을 우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광주·전남기업 고용 감소 예삿일 아니다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의 고용 인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가 전국기업 6만6103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고용 인원은 4만30명으로 2007년 4만1185명, 2008년 4만1050명에 비해 2년 새 1155명이 감소했다.

전남지역도 2007년 4만159명에서 2008년 4만1671명으로 917명 늘었다가 지난해는 4만1579명으로 다시 줄었다. 반면 서울은 2년 새 9만8448명(6.6%), 대전은 8448명(8.7%)이 증가해 광주·전남과는 큰 대비를 이뤘다.

이 같은 지역기업의 고용감소는 기업의 영세성에도 원인이 있지만,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지지부진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자체가 그동안 기업유치에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실속이 없었음이 증명된 것이다. 여기에다 설상가상으로 지역경제의 한 축을 이뤘던 중견건설업체의 잇단 도산까지 겹친 것도 고용감소를 부추긴 셈이다.

지역기업의 고용감소는 괜찮은 일자리가 그만큼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역 고급인력 유출-인구 및 소비 감소-지역경제 쇠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결코 예삿일이 아니다. 특히 수도권은 제쳐놓고라도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부권과의 경제력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광주·전남이 낙후에서 벗어나는 길은 기업유치 밖에 없다. 여수박람회나 F1과 같은 대형 이벤트도 좋지만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서는 낙후에서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기업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기업 하기 좋은 여건' 만들기에 전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민주 주요 당직자 인선 마무리

대변인에 차영씨 … 김동철 전략기획위장 등은 유임

10·3 전당대회 후 계파 간 신경전 속에서 4주 가량 지연된 민주당 주요 당직자 인선이 29일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이날 공동대변인 체제를 유지하기로 하고 여성인 차영 전 대변인을 추가로 임명했다. 또 정책위 수석부의장에 우제창 의원, 당 예결위원장에는 조재환 전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과 김동철 전략기획위원장, 김진표 지방정부위원장, 이규의 수석부대변인은 유임됐다.

이번 인사는 철저한 계파 안배가 이뤄진 통합용이라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요직인 사무부총장의 경우 조직 담당은 손학규계인 최광웅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재정 담당은 이학노 전 정동영 대선후보 조직단장, 대외 담당은 박주선 최고위원과 가까운 정진우 전 서울시의원이 임명됐다.

상근 부대변인도 조대현(손학규계), 김영근(정동영계), 황희 김현(정세균계)씨가 임명돼 계파 이해관계가 그대로 반영됐다. 이와 함께 대표 특보단장에 백원우 의원이 임명됐다.

이밖에 당 사무처 산하의 위원장도 비주류 연합체인 쇄신연대 소속의 장세환 의원(홍보미디어), 김근태계인 우원식 전 의원(대외협력), 손학규계인 정봉주 전 의원(교육연수), 정세균 최고위원과 가까운 노영민 의원(직능), 전대에서 천정배 최고위원을 도운 최문순 의원(유비쿼터스)을 각각 임명하는 등 계파별로 배치했다. '4대강 대운하반대 특위' 위원장에는 이인영 최고위원을 선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 참패 '사과'

민주 조영택·김영진 국회의원 "안이한 공천 반성"

민주당 광주 서구갑과 서구을 지역위원장인 조영택, 김영진 국회의원은 지난 27일 실시된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데 대해 지역민들에게 사과했다.

조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참패한 데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당을 아껴주시는 광주시민과 당원 동지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민심과 주민정서를 깊이 성찰하지 못하고, 안이한 공천방식에 안주해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는 점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오늘의 패배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심기일전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속으로 들어가 광주 시민의 사랑받는 민주당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구민들의 준엄한 채찍질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며 "저는 (지역위원장들) 측근 배제와 불합리한 공천제도 및 가산점 부여의 문제점 등을 바로잡고자 작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과적으로 오만한 공천으로 실망을 안겨 드린 것을 깊이 반성하며 어떠한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희망쇄신연대의 대표로서 민주당 혁신위원회 구성을 통해 불합리한 공천제도를 개선하고, 앞으로 있을 모든 공천권을 시민과 유권자에게 돌려 드리는 일대 공천개혁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오늘부터 남북이산가족 상봉

'2010년 추석 계기' 남북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30일부터 금강산에서 진행된다.

지난해 9월 26일~10월 1일 상봉 이후 13개월 만에 이뤄지는 이번 행사는 북측 신청자가 남측 가족을 만나는 1차 상봉(10월 30일~11월 1일)과 남측 신청자가 북측 가족을 만나는 2차 상봉(11월 3~5일)으로 나누어 열린다.

30일 금강산을 찾는 우리측 1차 상봉 가족들은 29일 오후 2시 속초 한화콘도에 모여 설레는 마음을 누르며 상봉 등록 절차를 밟았다.

남측 가족들은 대부분 한국전쟁 때 헤어진 북쪽 가족을 60여년 만에 만나게 된 것에 가슴 벅찬 표정이었다.

오빠 진병규(77)씨를 만나려고 전날 장성군에서 올라왔다는 진서옥(69) 할머니는 "서울에서 과자공장에 다녔던 오빠가 '서울 가서 돈 많이 벌어서 비단구두 사올테니까 엄마 말 잘 듣고 있어'라고 말하며 나갔다"면서 "오빠를 만나면 '비단구두 사갔고 왔어?'라고 물을 거다.

너무 많이 울 것 같아 손수건 4장을 새로 사왔다"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한화콘도에는 적십자사 속초, 양양 지구협의회의 자원봉사자 120여 명이 나와 가족들을 안내하며 접수를 도왔다.

/연합뉴스

오바마 미 대통령 내달 10일 한국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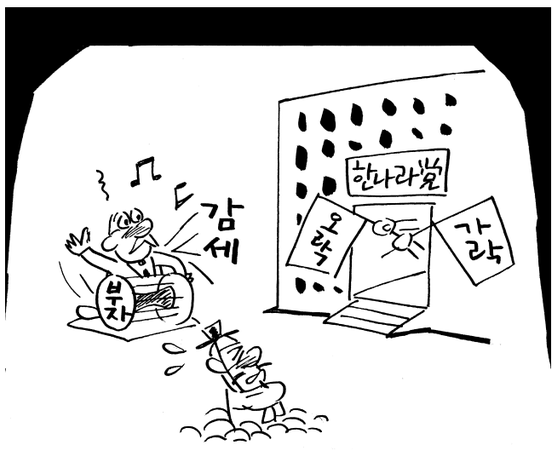
한미FTA·북핵 6자회담 등 의견 조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년만에 한국을 두번째 방문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내달 10일부터 12일까지 한국을 2박3일간 방문할 예정이다. 작년 11월 18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첫 공식 방문한 이후 1년만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달 12일 G20 정상회의 폐막일에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 G20에서 도출되는 성과를 평가하며, 이런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을 촉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방한 이틀째인 1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갖는다. 막판 의견조율이 진행중인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교착상태인 북핵 6자회담 재개방안, 북한의 권력승계 동향 진단, 기후변화협약을 비롯한 글로벌 이슈 협의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빛日만평

- 김종두



장단은 커녕…

軍, G-20 대비 최고 수준 대비태세 돌입

내달 13일까지 대북감시 강화

군 당국이 내달 서울에서 열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최고 수준의 군사대비태세에 돌입했다.

군 관계자는 29일 "지난 27일부터 최고 수준의 군사대비태세에 돌입했다"면서 "내달 13일까지 대북 감시수준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고 수준의 대비단계에서는 한미 연합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지상과 해상·공중 침투 및 국지도발 대비태세 격상,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국가 중요시설 경계 지원, 주요 행사장별 경호경비작전부대 예행연습 및 실기동훈련(FTX) 후 병력 투입 등이 이뤄진다.

지하철과 공항, 항만 등 다중 이용시설과 국가 중요시설에는 수방사 대테러팀과 화생방사령부의 화생방방어팀 등이 투입됐다.

특히 군은 미측에 대북감시전력의 증강지원을 요청했으며, 미측은 주한미군의 고공전략정찰기 U-2의 정찰 횟수를 늘리고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기지에 전개된 전략정찰기인 EP-3와 RC-135 등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U-2기는 고공에서 북한의 군사기지 배치 실태를 촬영하고 EP-3 정찰기는 무선·레이더 주파수와 함정의 통신체계 추적을, RC-135는 미사일기지 움직임 등을 각각 감시하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대북 정보감시 자산을 증강 운용하면서 북한군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는 등 즉응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방한계선(NLL) 침범 등 군사적 도발 8개 유형과 초경량 비행장치에 의한 테러 등 행사 방해 테러 9개 유형을 설정해 모의연습과 실제훈련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FAX	227-9500〉	〈FA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기획사업국	2200-555	〈FA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